



행사스케치

구제역 피해 복구 · FTA 추진 중단 등 6개안 요구

글 · 사진 : 편집부

구제역 피해 복구 · FTA 추진 중단 등 6개안 요구 농민 2천여 명 집결, 「2011 전국농민 결의 대회」



26개 농민단체가 소속된 한국농민연대(공동대표 윤요근, 이준동)는 지난 4월 1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구제역 피해보상! 농민생존권 쟁취! FTA 저지! 2011 전국 농민 결의 대회’ 를 개최했다. 여의도에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시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농민 2,000여 명이 집결해 결의 대회를 가졌다.

한국농민연대 김진범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 대회는 ▲구제역 피해 복구 ▲공공비축미 저가 방출 중단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FTA 추진 중단 ▲농협법 개악 규탄 ▲꽃을 뇌물로 취급하는 공무원 행동 강령 철회 등 6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 농업 현안 문제의 해결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대회사에서 윤요근 대표는 “농민들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는 축산업에 그동안 희망을 걸었지만 소와 돼지가 구제역으로 죽고 오리나 닭은 AI로 몰살당하는 등 농업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다”며 “4·27 재보선과 내년 대선, 총선에서 농민을 위한,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동 대표는 “세계 각국이 자국이 손해 보는 FTA를 하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데 반해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 큰 이익을 보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만약 FTA를 해야 한다면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 결의 대회는 농민 생존권 대책 촉구 및 가축질병 피해 등 축산업 문제에 대한 대회사 및 정치발언이 끝난 뒤 현장농민의 생생



①한국농민연대 참가단체 대표 인사 ②2011농민 결의 대회로 여의도에 모인 2천여 명의 농민 ③2천여 명의 농민가 ④농민가를 부르고 있는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⑤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는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⑥한국농민연대 이준동 공동대표

한 발언이 이어졌다. 경기도 파주시에 양돈업에 종사하는 박호근씨는 구제역으로 인해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을 살처분한 심정을 절절하게 읽어 내려가며 정부는 양돈 산업이 다시 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민연대는 결의 대회 끝으로 2천여 명의 농민들의 함성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고, 농민들이 제시한 6대 요구를 바탕으로 농업현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 농민대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 2011 전국농민결의대회 요구안 -

하나. 구제역 피해농가의 조속한 재건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 농가에게 책임전가 그만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하라.
- 구제역 피해 농가에 조속한 재건대책 추진하라.
- 농민들이 축산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공공비축미 저가 방출 중단하라!

- 정부는 쌀값하락을 부추기는 공공비축미 공매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쌀소득전직불제를 개정하여 쌀생산비를 보장하라.

하나. 면세유 등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하라!

- 비료, 농약 등 원자재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경영안정지금을 지원하라.
- 면세유 80만 킬리리터를 추가로 공급하고 면세유 공급대상을 농업용 트럭까지 확대하라.
- 2012년 만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라.

하나. 한미, 한EU, 한중 FTA 반대한다!

-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한EU FTA 영문본과 한글본의 불일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 피해를 재조사하라.
- 정부는 한미, 한EU, 한중FTA 등 모든 자유무역을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통상절차법 제정하라.

하나. 농협법 개악 규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하라!

- 연합회 방식으로 농협법을 재개정하라.
- 농협의 주체들이 함께하는 농협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추진하라.
- 국회는 통상절차법 제정하라.

하나. 농협법 개악 규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

-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 관련 부처는 꽃을 뇌물로 취급하지 말라.
-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지침과 사례집 등에 언급된 화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라.
- 아름다운 "꽃"생활문화를 위한 국민과 화훼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친화회 정책의 수행을 요구한다.

2011년 4월 12일

전국농민결의대회 참가자 일동